

##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김익한\*\*

1. 머리말
2. 공든 탑
3. 두 갈래 길
4. 도약을 위한 제언

### 1. 머리말

최근 일고 있는 세계 기록관리계의 새로운 추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려는 노력들은

\* 이 글은 2009년 4월 3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기록학회의 제 9회 기록학 학술심포지움 ‘기록관리법 10년 - 한국 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정혜린, 김익한,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 관리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0, 2009; 강수나, 김익한,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9, 2009

기록관리의 발전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해준다.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록관리기관의 노력의 배경에 행정개혁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예 책임운영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바꾼 곳이 있는가 하면, 체계적인 기관평가에 의해 존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곳도 있다. 그리 보면 우리 기록관리계의 상황, 우리 기관들의 노력에 비해 세계 기록관리계의 추세는 처절하기까지 하다. 공공서비스는 이제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여부를 가리는 잣대이다.

같은 맥락에 있는 현상 중 하나가 통합과 전문화의 추세이다. 서비스 객체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고객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관 내부의 허다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기록관의 조직 자체를 통합해버린 캐나다의 선택 뒤에는 고객 우선의 지향이 깔려 있다.<sup>1)</sup> 민간사료와 공공기록 서비스의 통합, 박물관 정보와의 통합 서비스 등을 추진한 영국의 사례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존재한다.<sup>2)</sup>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진보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었다. 그러면서도 분권적으로 발전해 온 각종 전문영역의 아카이브즈들은 건재하고 있다. 이 역시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성의 발전이 통합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공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공존은 통합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주므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추세는 거버넌스와 웹 2.0에서 발견된다. 새천년에 들

---

1) 캐나다의 사례에 대해서는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

[www.collectionscanada.gc.ca](http://www.collectionscanada.gc.ca) 참조.

2) 영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TNA(The National Archives) [www.nationalarchives.gov.uk](http://www.nationalarchives.gov.uk) 참조.

면서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세계 기록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sup>3)</sup> 고객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기록관리의 과정과 방법에 협치와 참여의 틀이 고민되는 수준을 넘어 실행되기조차 한다. 단지 정보사회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관 스스로가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웹 2.0의 실현자로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sup>4)</sup> 더 이상 종래의 관리자의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크게 보면 고객과 호흡하며 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성이 전제된 네트워킹 구조 역시 안착시켜가는 추세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거대한 구조물들과 기록관리의 기축 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가고 있다. EA와 기록관리체계가 맞물리면서 한층 고도화된 기록요건(record requirement)이 기록관리의 방법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sup>5)</sup> 기록연속체론 이후 세계 기록관리계는 더 이상 기록관리를 고립무원한 ‘역사’ 창고로 후퇴시키지 않는다.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패키지군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업 내의 지원 기능 일반과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기록과 정보, 각종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미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sup>6)</sup>

책임설명성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과 동시에

---

3) 오향녕,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기록학연구』 11호, 한국기록학회, 2007, 15~40쪽 참조.

4) 오세근, 「최근 웹 서비스 트렌드와 웹 2.0 B/M」 『주간기술동향』 1275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6 참조.

5) EA에 대해서는 <http://www.enterprise-architecture.info> 참조.

6) “MS·IBM 신제품 출시- 콘텐츠 관리시장 후끈”, 파이낸셜뉴스, 2002.12.6

문화와 지식에 기여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추세이다. 기록이 흐트러진 사회를 정상화 하는 기제에서 문화와 지식을 창조하는 원천으로까지 진보한 결과일 것이다.

세계 기록관리계는 진전된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해 투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데이터셋 기록관리에 대한 고민, 웹 아카이빙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재현정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옹색하지 않다.<sup>7)</sup>

정확하게 10년 전 기록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가기록원과 기록학계는 더 많은 선진사례를 모으기 위해 분주했었다. 또 세계가 놀랄만한 강도와 속도로 그 선진사례들을 빨아들였다. 지금의 선진적인 한국 기록관리가 설 수 있는 기반이 그때 닦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한 진보의 가속도가 몇 년 전 피크에 달하였고 우리도 기록관리 선진국이라 자부할 만한 현상들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성남 나라기록관이 우뚝 서는 날 우리는 이제 할만치 하였다고 자신하기조차 했다.

기록관리법 10년.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의 속도를 느끼며,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주했던 기록관리계의 좁은 시야의 위험성을 느끼며, 이제는 근원을 되짚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

---

7) Darlington Jeffrey, "A National Archive of Datasets" Ariadne39, 2004, Kathleen R. Murray. Inga K. Hish, "Archiving Web-published materials : A needs assessment of librarians, researchers, and content provider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5. 2008, pp.66-89, Brown, A., Archiving Website: a practical guide for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facet publishing. 2006 등 참조.

리 스스로 선진이라 생각하면서 잠시 눈감았던 세계의 추세에도 다시 겸허한 시선을 보낼 때가 되었다. 지키려 움켜쥐면 부서지고 고이 채워 놓아두면 지켜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록관리계가 아닐까? 이제 고이 채우는 일을 위해 안팎을 바라보며 새로운 발전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 2. 공든 탑

작년 개관한 나라기록관은 기록관리계가 쌓아 올린 성과를 상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대전청사에 더부살이 하느라 전문서고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수준의 시설을 갖춘 나라기록관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차원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진행되어왔던 국가기록 관리의 발전이 이제 하드웨어 차원에서도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설립되고 인력의 면에서도 일반 공공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동반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전체,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였다. 이러한 인력적 측면에서의 성과야말로 한국 기록관리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공든 탑이 아닐 수 없다.

공든 탑은 잘 가꾸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충실히 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기록관의 건립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국가기록관리의 내용 역시 집약 발전을 이룩한 점은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은 특히 우리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업무환경이 이미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되었고 전자정부 사업의 진전으로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발전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 보급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진본유지를 위한 여러 방법론과 기술이 시스템 설계에 충분히 고려되었고 지속적인 버전 업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발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적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sup>8)</sup>

2006년 기록관리법의 전면 개정은 이러한 새로운 기록관리의 시대를 여는 제도적 장치였다. 전자기록관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었고 전자기록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법들이 포함되었으며 각급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의 역시 보완됨으로써 제도적 장치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으로는 비공개 기록의 주기적 재평가, 비공개 기록의 30년 공개원칙 등의 시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굿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첫 삽을 뜨기도 하였다.<sup>9)</sup>

표준관리체계를 확립한 것도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

---

8) 포괄적으로 다룬 문건으로 김익한,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전략」,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특강자료, 2006 참조.

9) 박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호, 한국기록학회, 2006, 3~40쪽.

는 안될 일이었다.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체계를 정비하고 국가표준, 공공표준, 기관표준들을 하나씩 제정해감으로써 우리는 기록관리분야의 표준 강국으로 부상할 기반을 갖추 수 있었다. 기록관리 일반에 대한 포괄적 표준인 KS X ISO 15489를 제정한 것을 필두로 하여 시스템, 메타데이터, 보존 포맷, 보존시설 환경 등 각 영역의 표준들을 적극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기록관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sup>10)</sup>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그러한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관 평가.점검제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일은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기록원이 주도하여 구축해가고 있는 이 제도는 평가.점검 방법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가.점검 대상 확대의 측면에서 모두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확대 발전의 측면은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나 기록포털서비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주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기록관리기관 못지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11)</sup> 특히 기록의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콘텐츠 서비스 영역의 발전은 우리 기록관리계가 세계의 새로운 추세에 발맞추어 가려 하

---

10) 표준제정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의 기관표준 현황을 참조하라.  
[http://www.archives.go.kr/archives.do?uri=standard\\_02&depth1\\_code=7&depth2\\_code=2&depth3\\_code=2](http://www.archives.go.kr/archives.do?uri=standard_02&depth1_code=7&depth2_code=2&depth3_code=2)

11)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 기록관리계의 공든 탑은 비교적 기초가 튼튼한, 그리하여 쉬 무너지지 않는 탑임에 틀림없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들이며 지속 발전을 보장할 토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는 또 앞으로 내달리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통합화과 전문화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있으며 지식정보자원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발전전략, 미래에 대비한 기술 대응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 3. 두 갈래 길

공든 탑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2000년을 전후한 때와 같은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의 공든 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행의 동력이 떨어질 경우 급속히 그 효과성이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나라기록관처럼 물리적으로 그 성과를 거둔 것이나 전문인력을 배치해 둔 것이 존재하는 한 지속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표준, 시스템 등은 현장에서의 실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쉽게 무너져버릴 공든 탑일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록관리 발전의 두 갈래 길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기록관리 역사를 보면 대체로 현장의 필요에 의해 기록관리가 발전해가는 것이 보통이다. 중앙정부



역할의 강약에 따라 집권적 발전의 길을 걷기도, 분권적 발전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모두 현장의 필요와 맞물려 성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그 성격을 같이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다분히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집행이 공공기록관리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집권적 발전의 길을 경험하고 있다. 기록관리 후발국가로서 급속한 성장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한 역사였을 수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한 발전의 길을 평가절하하거나 과거로 회기하여 다시 시작하려는 입장은 아무 현실적 의미도 지니지 못하며 옳지도 않다. 그렇다고 두 갈래 길에서 계속 극단적인 집권적 발전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 물론 그 역시 그렇지 않다.

10년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공기록 관리는 현장 취약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그리 많이 극복하지 못하였다. 앞서 말한 극단적인 집권적 발전의 결과 기록관리 수혜자인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가 체제의 발전에 오히려 따라 오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공공기관 일반의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자 차량관리업무까지 배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조차 하였다.<sup>12)</sup> 선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까지는 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각급기관이 시스템 도입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다.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 서비스나 기록포털 서비스가 높은 수준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기록원 고객의 상당수는 각종 증빙기록 이용자이다. 현장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록관리 기관의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에서는 아직도 전문적인 기관 설립을 늦추고 있다.

---

12) “기록연구사는 뭘질업무용?”, 한겨레, 2005.10.14

표준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은 물론 기관표준조차 그 제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표준의 이행 수준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결국 두 갈래 길에서 극단적인 집권적 발전의 길을 택한 우리는 고속 성장이라는 결실을 얻은 대신 기록관리 현장과 고객이라는 두 차원에서 취약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권적 발전의 동력이 약해질 경우 쉽게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진보의 가속도가 피크에 이르면 다시 약간의 하향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종의 정체를 그저 정체를 국면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지작업의 시기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집권적 발전의 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지금의 시점에서 성찰해야 할 것은 집권적 발전의 길을 보완하여 그 이면의 취약성을 단계적으로 극복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하나는 그간 쌓아올린 공든 탑의 내실과 실질을 다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기록관리 발전의 보루인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기록관리기관을 정비하여 내실과 실질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더욱 강고하고 축성해야 한다. 또한 전략 방향을 서비스 영역에 집중하여 일의 성과를 통해 기록생산자와 기록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집권적 발전의 방법을 유지하되 세계의 추이를 잘 관찰하면서 그 중분권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등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 4. 도약을 위한 제언

내실과 실질을 다지는 일과 관련해서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은 국가기록원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국가기록원이 조직과 하드웨어의 양 측면에서 모두 고속성장을 이룩해 낸 것이야말로 기록관리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미처 충분히 챙기지 못한 일들이 있다. 대전청사에 본부를 두고 성남에 나라기록관, 부산에 역사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체계부터 정상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입지 등의 면에서 볼 때 성남이 국가기록원의 본원으로 역할하고, 기록 생산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대전청사, 앞으로 많은 생산기관이 이전할 행복도시, 그리고 현재의 부산 역사기록원 세 곳에 분원을 두며, 서울에 서비스종합센터를 새로이 개설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에 입각한 시설의 안정적 배치는 기관 운영의 내실을 다져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 역시 서둘러야 할 일이다.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 제고는 앞으로의 기록관리 발전을 보장할 핵심 부분이다. 그동안의 10년은 조직을 키우고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확보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향한 지금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문성 확보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중간관리층에 기록관리에 무경험한 행정 전문인력이 쉽게 배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간관리층에 기록관리에 전문적인 연구직과 사

서적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일에 단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허리가 튼튼한 조직이 길게 건디며 필요시 도약할 힘을 비축할 수 있다. 10년간의 고속성장을 이끌며 중간관리층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확보 전략은 긴요하면서 또 실천 가능한 일이다. 국가기록원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를 혁신하며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지닌 기록관리 전문인력들을 허리에 두텁게 배치하는 일은 집행 동력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공든 탑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기록관리의 도약은 통합 혹은 강력한 협력 모델의 방향에서 이뤄질 것이다. 앞서 캐나다, 영국의 선례를 들었듯이 우리 역시 보다 적극적인 고객 지향의 전략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등의 문화기관과의 통합 혹은 협력 모델의 강화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과의 강력한 협력모델은 각 기관의 고객 서비스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상설 협력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미온적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적어도 자원개발전략부문과 서비스전략부문을 기관통합 상설기구가 담당하고 그 집행을 각 기관이 분담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이 내실을 다져 국가의 기록센터, 사료센터, 지식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자원개발과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양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하나의 협력 모델을 요하는 분야가 전자정부이다. 사실 전자기록관리 영역은 이미 전자정부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이다. 실시간추진단에 국가기록원의 직원이 파견되는 것 역시 전자정부와 전자기록관리가 긴밀한 연관 관계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의 구조나 강도의 측면에서 보다 근원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개념적으로 본다면 모든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적 기록관리의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 전자정부사업은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장기보존, 이용될 수 있는가를 전제로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 없이 이미 많은 부분이 전자적 처리과정으로 전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셋 기록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다종다양한 데이터셋을 전자기록으로 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운영의 기반이 되는 영역에 국가기록원이 적극 개입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전자정부의 체계적, 효율적 발전을 위해 각급 기관별로 EA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업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프로세스와 서식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EA사업에서 업무분석을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인풋과 아웃풋을 조사분석함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를 위해 우리는 또다시 업무분석을 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록과 해당 전자기록의 요구사항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전자정부사업이 업무의 전자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고 전자기록관리가 업무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이 양자는 당연히 하나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효율

을 기할 수 있다. 정책 형성 영역과 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영역 모두에서 전자정부는 기록관리와 상설적이고 강력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정부, 기록관리 모두가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현장과 고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지점은 전문영역과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이다. 기록관리의 기본을 갖추는 단계에서는 집권적 구조 속에 모든 영역을 결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기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영구기록관리기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른 기능 부여방식을 지양하고 기능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록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법원 계통에 속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서로 독립된 영구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은 어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문화재관련 기록이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상관성 없이 관리되는 일 역시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체제라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의 인사기록과 문화재관련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정작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는 문화재관련 기록은 각각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공공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기록을 넘어 의미 있는 기록과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의 질을 높이는 일은 현 기록관 체계에서는 난망할 뿐이다. 기능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문화재청에 일반기록을 관리하는 기록관과 더불어 문화재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영구기록관리기관을 설립, 운영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표현예술을 포함한 문화영역의 전문 영구기록관리기관,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 영구기록관리기관, 조금 더 나아가간다면 의료보건 영역의 전문 영구기록관리기관 등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전문영역을 분권화시키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강화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다른 차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성과 특수성을 강화시켜가는 것 역시 현장 취약성과 고객 취약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약성은 질 높은 서비스가 축적되어 현장이건 일반 고객이건 기록관리의 효능을 스스로 자각 할 때 비로소 극복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기관은 중앙과는 달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화된 기관으로 성장해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서관, 문화원 등의 기관과의 조직 통합을 이루면서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기관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중앙에서 제시한 행정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기록관리기관 설립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특성을 살린 통합적인 문화기관으로서 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도, 종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기록관리기관 설립의 과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전략방향은 고객관리와 고객 요구분석 기능의 확대발전에서 찾아져야

한다. 웹 서비스 들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고객관리에 의한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한 관리방법의 개선과 같은 서비스.관리방법 환류체계는 아직 정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설명책임성을 실현하는 기록관리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식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에 따라 특히 후자의 요구가 비약적으로 증대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콘텐츠 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위한 관리체계의 혁신은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고객 요구분석에 기초한 상세한 콘텐츠 맵의 관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의 조직화 및 생산 체계의 구축 등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전략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관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기록원과 학계의 노력의 결과로 정책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한 관학협력체계는 나름대로 성장해올 수 있었다. 학계의 지식이 기록관리 영역의 전략 설계나 방법론 개발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동시에 학계의 실천적 이론 개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관산협력체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지원체계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 성장을 추진하다 보니 기록관리기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계가 저가 발주와 과도한 요구에 휘둘려 제대로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IBM이나 EMC와 같은 거대 기업이 기록관리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의 전문업체들은 성장 발전을 꿈꾸기 보다는 생존을 꿈꿔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업영역의 발전이 기록관리의 방법적 진보를 함께 끌어가는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기록 선진국에 진입하여 세계 수준의 발전과 도약을 생각하는 우리 기록관리계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기록관리계는 정책의 입안이나 그 시행에 있어 유관 산업영역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적어도 선진 어느 국가보다도 고가 발주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그런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록관리 산업영역의 발전은 특히 전자기록관리의 기술적 발전을 견인해갈 것이며 현재의 시점에서는 관이 그러한 길을 터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성만을 움켜쥐었다면 공든 탑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특히 고속 성장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간의 성장을 토대로 하되 세계의 추세에 다시 눈을 돌리고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가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기본적인 화두는 고객 지향일 것이다. 이 화두를 풀고 공든 탑을 계속 더 쌓아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허리를 튼튼히 하여 전문역량을 키우고, 전자정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모델을 공고히 하며, 지방과 전문영역의 분권전략을 병행하고, 고객관리에 기반하여 지식·문화서비스를 진전시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2의 도약의 대열에 산업계를 동참시킬 수 있는 시야 역시 갖아야 한다. 성장 속도의 피크를 경과한 정지사업의 이 기간을 전략방향의 재설계를 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